

미국 탄소가격제 도입 관련 정책 동향

- ◆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 검토 중
- ◆ 특정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연구하는 프루브 잇(PROVE IT) 법안 발의
- ◆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나 초당적인 논의가 진행 중

I. 개 요

- 존 포데스타(John Podesta) 백악관 기후특사는 인터뷰(7.1)에서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*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.
 - * 탄소가격제(carbon pricing system)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
 - 포데스타 특사는 중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초당파적인 우려로 탄소가격제에 관한 관심이 다음 행정부에서도 고조될 수 있다고 언급
 - 유럽연합(EU)에서는 시멘트, 철강 등 탄소집약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제도를 시행중이며, 중국 역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고려 중
- 포데스타 특사는 청정 생산을 촉진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, 정책 메커니즘은 생산되는 제품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
 - 포데스타 특사는 고탄소 생산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탄소를 덤핑하는 외국 생산자들을 비난
 - 올해 4월에 발표된 '기후 및 무역 전담 태스크포스'는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검토 진행
 -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,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초당적인 논의가 진행 중

II. 탄소가격제 도입 추진 배경

□ 전세계적으로 탄소가격제 적용 확대

-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50여 개국에서 75개의 탄소가격제가 적용되고 있으며,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%가 탄소가격제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.
- EU는 '26년부터 알루미늄에서 비료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EU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국경제* 부과 예정
 - * 탄소국경제도(CBAM)은 유럽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,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 부과
- '19년 EU 집행위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EU의 '30년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기존 30%에서 55%로 상향조정했고, 탄소배출권 거래제(EIS)* 적용 범위 확대와 CBAM 도입 명시
 - * Emissions Trading System: 탄소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
- 중국은 CBAM 도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(ETS)* 적용 대상 업종을 기존의 발전부문에서 철강과 시멘트로 확대
- 터키와 브라질도 ETS 도입하는 과정에 있고, 영국은 '27년에 CBAM 도입 예정

□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

- 미국 양당은 중국이 고탄소 배출을 통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탄소 배출 정책 사용을 지지
-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ITR 대표는 자신의 저서인 '공짜 무역은 없다(No Trade is Free)'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현실에 의문 제기
- 포데스타 고문은 "탄소 관련 무역 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"라고 언급

II. 관련 미국 입법 및 정책 변화

□ 존 커티스 하원의원(R-UT)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(D-CA)은 프루브 잇(PROVE IT) 법안* 발의(7.9)

* Providing Reliable, Objective,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

- 동 법안의 목적은 미국 및 특정 외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*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에너지부에게 요구

* 특정 제품의 추출, 생산, 가공, 제공,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

-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, G7 회원국,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, 해외우려국 및 해당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

- 연구 기한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첫 번째 보고서 제출, 이후 5년마다 갱신

- 새로운 탄소 과세를 부과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며,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의무 보고 요구사항을 설정하지 않음.

- 동 법안의 목표는 △미국 산업의 저탄소 생산을 강조, △공정한 글로벌 경쟁 보장, △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

-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, 시멘트, 철강, 플라스틱, 바이오 연료, 비료, 유리, 수소, 리튬 이온 배터리, 천연가스, 석유화학 등 22개의 HTS 제품들 포함

- 기대 효과는 △미국 산업의 저탄소 배출 경쟁력을 강조하여 경제적 이익 보호, △타국의 탄소배출량 계산 오류 방지, △인권 침해를 통해 시장 경쟁 우위를 얻는 사례 파악

□ 빌 캐시디 상원의원(R-LA) 해외오염관세 법안(Foreign Pollution Fee Act) 발의(23.11.2)

- 동 법안의 목적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오염관세 부과

-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미국 평균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

-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유리, 수소, 천연가스, 원유, 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 포함

III. 현지 반응

- 프루브 잇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캘리포니아, 유타, 뉴욕, 오리건주 공화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이 동 법안을 공동 발의
- 미국 철강협회, 포틀랜드 시멘트 협회, 미국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동 법안이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찬성 서한 발신(7.9)
- 보수 단체들은 고탄소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탄소세 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동 법안에 관하여 적극적인 반대 표명
- 포데스타 고문은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녹색 전환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표명
-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(R-N.D.)은 프루브 잇 법안이 의회 내 반중 정서를 반영하며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주장
-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정책에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당파적인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힘.

[자료 : 백악관, 상무부, 현지 언론(폴리티코, 블룸버그 등)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]